

# 건설공사비 지수, 사상 첫 하락

〈연간비교 수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비 등 직접공사비를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떨어졌다. 최근 급락한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철강제품 가격의 급락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3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13.96(2010년이 기준치인 100)으로 작년 3월보다 0.04% 떨어졌다. 작년 11월 1.57%, 12월 0.91%, 올해 1월 0.84%, 2월 0.65%로 상승폭이 둔화된 끝에 3월에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선 것.

전월과 비교해 지수가 떨어지는 일은 빈번하지만 1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매년 상승하는 노임이 반영된 건설공사비 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하락한 것은 거의 처음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와 0.5%씩 떨어진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78%씩 올랐고 그 이전인

지난 3월, 113.96 기록  
전년 동기보다 0.04% 감소  
토목공사 투입원가도 ↓  
철강제품 가격 급락 영향

2011년과 2012년에는 7.5%와 3.3% 각각 상승했다. 반면 올해 들어 증가폭이 1월 0.84%에서 2월 누적 0.75%에 이어 3월 누적치(1분기)는 0.48%까지 둔화됐다.

1분기 누적 증감률만 놓고 보면 토목건설 분야의 공사비 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이미 0.22% 하락세로 돌아섰고 도시토목(-1.75%), 산업플랜트(-1.41%), 철도시설(-0.74%)의 1분기 공사비 하락폭이 컸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3월 한달에만 전달과 비교해 2.21%와 2.09%가 하락한 표면처리강재와 철강관, 그리고 형강(-1.97%), 나사 및 철선제품(-0.68%), 강선(-0.46%) 등 철강제품

가격의 급락세 탓이란 게 연구원 설명이다. 최근 시멘트·레미콘 등 다른 자재값의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인 점까지 감안하면 건설공사비 지수마저 생산자 물가지수처럼 누적치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공사비지수가 떨어질수록 건설사들의 원가부담은 줄어들지만 문제는 이와 연동해 정부의 건설공사 원가산정 기준가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지수이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자재가 하락폭을 1월에 인상된 노임이 지탱하고 있지만 전반적 물가 하락세 속에 역부족이다. 다만 공사비 지수 영향이 큰 유가가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 표준시장단가 구축 잔결음

조사·관리 전담센터 내달 윤곽  
300억이상 현장 전수조사 통해  
하반기 적용단가 8월 공고 예정

실적공사비의 대안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 구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조사와 관리를 전담할 공사비평가관리센터는 다음달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

공단가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 지난 2월28일 상반기 적용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하반기 새로 적용할 표준시장단가 마련을 위한 것이다. 7월 초까지 작업을 완료한 후 8월에 새로운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된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조사기간이 충분치 않아 현장에 많이 적용하거나 현실과의 괴리가 큰 공종을 우선 뽑아 조사했다.

이번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모두 조사한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공종이 300억원 이상 현장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으로 확대된다. 1968개 공종 가운데 공사비 300억원 이상 현장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첫 조사 때는 포함되지 않은 입찰단가 등의 조사도 처음 시행된다. 조사의 질도 상반기보다 더욱 자세하게 이뤄진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동시에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일부 중요한 현장들을 뽑아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원칙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청과 원수급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은 물론이고 관련 협회 등이 함께한다. 이후에는 조사가격이 타당하지 않거나 검증작업도 거친다.

이 같은 작업을 전담할 공사비평가관리센터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6월께 구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는 건설기술연구원 기존 조직이 조사를 맡고 있지만, 센터가 출범하면 분석 분야보강과 보정기준 마련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다른 업무를 함께 하는 건설연인력들이 표준시장단가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관련 협회인력이 센터에 합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형화된 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공가격과 최대한 근접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중심제 수주독점 방지 장치 ‘윤탁’

# ‘시공여유율’ 빼고

〈최근 1년간 수주업체 감점〉

# ‘실적평가’ 방식 손질

종합심사낙찰제의 수주 독점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서서히 윤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나눠 먹기’ 제도라는 논란이 불거진 시공여유율 대신 시공실적 단순 합산을 통해 중견·중소건설사 간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실적 100% 인정  
중견·중소사 공동도급 활성화 유도  
지역업체 가점으로 입찰 기회 확대  
시공여유율은 동점자 처리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낙찰제 수주 독점 방지장치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감점하는 시공여유율은 일단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들조차 시공여유율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인위적인 물량 배분을 유도하는 시공여유율 대신 동일공법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수주 편중현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동일공법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면서 보유 실적이 많지 않고 지분 비율이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 입장에서선 대형 건설사에 의지하지 않는 한 만점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 100%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중견·중소 건설사 간 공동도급으로도

만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활발한 공동도급을 통해 대형 건설사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만 대표자의 실적도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같이 100% 인정할지 아니면 대표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을 적용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시공여유율이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 폐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저가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시공여유율이 낮은 업체,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업체, 균형가격에 근접한 업체, 저가투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시공여유율을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공동도급 인센티브는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제도로 변경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동일공법 시공실적 평가 개선에 따라 중견·중소 건설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활발해지면 공동도급 인센티브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사 규모별, 지역업체 비율별로 0.3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공사수행능력에 가산할지, 시공실적 또는 사회적 책임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어느 항목에 가산하느냐에 따라 변별력이 크게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수주독점 방지장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14일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